

산업입지 정책동향

[2026년 상반기]

2026. 7.

본 자료는 2026년 상반기 현재 산업입지 관련 현안 및 정책동향을 안내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 종합상담실 한국산업단지공단 파견관(☎ 02-3497-1956)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 차



I. 산업단지 동향 1

1. 산업단지 개발 현황 1

2. 산업단지 분양 현황 3

II. 주요 입지 정책 동향 4

1.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첨단 신산업을 키우고 문화 편의를 더하다 4

2.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공동 활용하는 설비, 이번 기회에 저탄소·친환경
설비로 바꿔봐요 6

3. 첨단산업 공급망 탄탄히, 국내 생산기반 투자 확대 8

I. 산업단지 동향

1 산업단지 개발 현황

□ 전국 산업단지 유형별 조성 현황

- 2025년 12월말 기준, 전국 산업단지는 총 1,359개 지정. 총 1,481,716천m² 면적 가운데 분양대상면적은 59.4%(880,351천m²) 차지
- 단지 수 기준으로 일반단지(765개), 농공단지(485개)가 많지만, 지정면적은 국가단지, 일반단지 순으로 넓으며 단지 수 대비 지정면적은 농공단지(161천m²)가 제일 작음. 전체 분양대상면적은 일반단지, 국가단지, 농공단지 순으로 규모가 큼

< 산업단지 개발 현황(2025년 12월말 기준) >

(단위 : 개, 천m²)

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단지당 평균 지정면적	공급대상면적		
				합계	조성용지	미조성용지
국가	55	799,309	14,533	398,642	351,439	47,203
일반	765	589,480	771	412,264	349,652	62,612
도시첨단	54	14,606	270	9,222	5,470	3,752
농공	485	78,321	161	60,224	59,017	1,208
합계	1,359	1,481,716	1,090	880,352	765,578	114,775

※ 자료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 지역별 산업단지 개발 현황

- 단지 수로는 경기도가 212개로 가장 많고, 경남 210개, 충청남도 183개, 경상북도 158개 순
- 지정면적 기준으로 경기도가 261,343천m²으로 가장 넓으며, 전라남도 230,903천m², 경상북도 141,216천m², 경상남도 141,076천m² 순으로 넓음. 개발미대상 부지면적*은 전라남도가 91,175천m²로 가장 넓음

* 산업단지 지정면적 중 개발하지 않는 지역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유보지, 해면, 비탈면 등을 포함

- 시도별 산업단지 개발비율은 대구광역시(99.3%)로 가장 높고, 제주도(64.1%), 세종시(72.9%), 충청북도(77.5%), 경상북도(81.7%), 경상남도(82.7%), 충청남도(83.0%) 등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개발비율이 낮은 산업단지는 최근 신규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이 많으며, 경기도(용인한림제약도시첨단산업단지, 경기용인플랫폼시티도시첨단산업단지, 여주가남일반산업단지, 용인죽능일반산업단지, 가남신해1일반산업단지, 가남신해2일반산업단지, 가남신해3일반산업단지, 가남신해4일반산업단지, 가남신해5일반산업단지, 남양주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 충청북도(증평3일반산업단지, 중원제2일반산업단지, 생극제2산업단지, 청주클래식스마트밸리산업단지, 진천혁신스마트밸리산업단지, 오송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경상남도(양산주남일반산업단지), 경상북도(김천자동차튜닝일반산업단지, 김천1일반산업단지(4단계), 경북도청신도시(2단계)도시첨단산업단지, 청도자연드림파크일반산업단지) 등이 해당

< 시도별 개발현황(2025년 12월말 기준) >

(단위 : 개, 천㎡)

시도	단지수	지정면적	개발대상			개발미대상 면적	개발비율*
			소계	개발면적	미개발면적		
서울	4	3,274	3,274	3,107	167	0	94.9
부산	39	47,430	47,385	43,273	4,112	45	91.3
대구	24	45,012	45,012	44,684	328	0	99.3
인천	19	23,502	23,502	22,002	1,499	0	93.6
광주	13	30,088	30,088	29,333	755	0	97.5
대전	6	53,266	46,233	45,832	401	7,033	99.1
울산	33	92,182	84,417	77,865	6,552	7,766	92.2
세종	19	13,119	13,061	9,521	3,540	57	72.9
경기	212	261,343	206,181	147,223	58,958	55,162	71.4
강원	83	25,390	23,403	22,129	1,275	1,986	94.6
충북	150	107,797	107,570	83,320	24,251	227	77.5
충남	183	130,047	129,071	107,141	21,930	977	83.0
전북	91	133,311	91,752	79,107	12,645	41,559	86.2
전남	108	230,903	139,728	119,241	20,486	91,175	85.3
경북	159	141,216	128,707	105,144	23,563	12,509	81.7
경남	210	141,076	136,996	113,331	23,665	4,080	82.7
제주	7	2,760	2,760	1,768	992	0	64.1
전국	1,359	1,481,716	1,259,140	1,054,021	205,119	222,576	83.7

* 전체 개발대상면적 중 실제 개발이 이루어진 면적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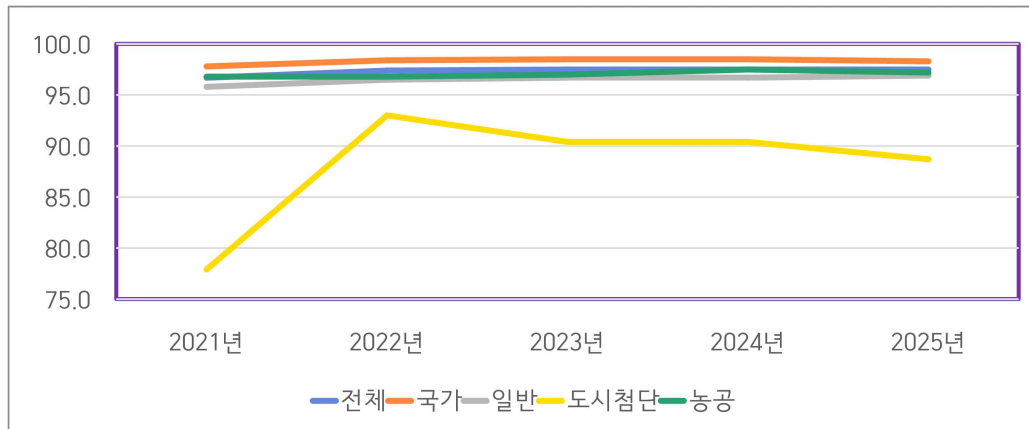
※ 자료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2

산업단지 분양 현황

- 2025년 12월말 기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분양률은 97.4%로 직전년도 수준 유지

< 산업시설용지 분양률(2021~2025년) >



* 자료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 지역별 분양률 모두 90%를 상회, 제주는 분양공고 면적이 모두 분양 됨. 6개 광역시 평균 분양률은 98.7%로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분양률을 기록. 6개 광역시 분양공고면적(157,700천㎡) 중미분양면적은 1.2%(1,838천㎡)
- 6개 도와 3개 특별자치도의 평균 분양률은 96.9%로, 광역시보다 낮은 수준. 강원(94.0%), 경남(95.8%), 전북(96.3%) 충남(96.3%), 등 5개 지역은 전국 평균 미달
- 미분양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경남(2,893천㎡)으로 경남항공국가산단, 대송일반산단(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등의 대규모 입지가 조성중이기 때문. 일반산업단지의 미분양 면적(9,811천㎡) 비율이 가장 큼

< 시도별 산업시설용지 분양률(2025년 6월말 기준) >

구분	분양률(%)	구분	분양률(%)
서울	97.7	강원	94.0
부산	98.8	충북	96.8
대구	97.7	충남	96.3
인천	99.6	전북	96.3
광주	98.2	전남	97.8
대전	98.0	경북	97.7
울산	99.7	경남	95.8
세종	98.5	제주	100.0
경기	97.8	전국	97.4

* 자료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Ⅱ. 주요 입지정책 동향

1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첨단·신산업을 키우고 문화·편의를 더하다

-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등 입지규제 합리화와 첨단·신산업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 이번 개정은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종과 부대시설 활용 범위를 넓히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신산업 투자와 기업활동을 촉진하려는 규제완화 패키지임
 -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내 공사업 등록을 허용하여, 별도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부담을 완화
 - 지식·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업종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내 신산업 입주를 촉진하고, 첨단산업 분야 공장 신·증설과 투자 활성화를 지원
 - 공장 부대시설인 문화·체육시설을 인근 기업의 근로자와 지역주민에게 무료 개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산업단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지역사회 기여 기능을 강화
 - 산업단지 녹지구역과 매립 종료 폐기물매립부지에 문화·체육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
 - 공장 종업원 대상 카페·편의점 등을 부대시설로 명시하여 용도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부담 완화와 근로자 편의 개선에도
 -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도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하여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를 유도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고서류 통지·송달을 전자 방식으로 확대하고, 비제조업 사업개시신고 현장확인을 비대면으로 허용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사항

구분	내용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등의 산업단지 입주허용	(현행) A사는 산단에서 변압기, 차단기 등 전기설비를 제조하면서 시공(공사업)도 함께 하려 했으나, 공사업이 입주할 수 없어 산단 밖에 별도 사무실 마련 필요 (개선) 기존 산단 전기설비 제조 사업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영위 가능
지식 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업종 범위의 확대	(현행) B사는 수도권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공장을 증설하려 했으나 첨단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증설에 애로 (개선) 첨단업종 범위가 확대되어 투자유치를 통한 공장 증설 가능
공장 부대시설인 문화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무료 개방 허용	(현행) C사는 산단에 입주 기업으로 사회공헌 차원에서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해 전시관을 건립하려는데, 산단 입지규제로 전시관 건립에 애로 (개선) 산업단지 공장 내에 부대시설로 전시관을 건립하여 지역사 회에 공헌 허용
녹지구역 및 폐기물매립부지에 문화 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허용	(현행) 산업단지 녹지구역 및 매립 종료 폐기물매립부지에는 문화· 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제한 (개선) 「공원녹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허용
공장 내 카페, 편의점 등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현행) 공장 내 카페·편의점 등 종업원 편의시설 설치 시 건축물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 부담 발생 (개선) 공장 종업원 대상 카페·편의점 등을 공장 부대시설로 명시 하여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에 오피스텔 허용	(현행)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한해 오피스텔 설치 허용 (개선)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도 오피스텔 설치 허용
각종 신고서류를 전자 통지 송달, 비제조업 비대면 현장확인 가능	(현행)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고서류 통지·송달은 우편 중심이며, 비제조업 사업개시신고 시 관리기관의 직접 현장확인 필요 (개선) SNS 등 전자방식으로 신고서류를 통지·송달, 비제조업 사업 개시신고 현장확인은 영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허용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공동 활용하는 설비, 이번 기회에 저탄소·친환경 설비로 바꿔보요

-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의 그린전환(GX)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저탄소·고효율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산단 친환경 설비 인프라 지원 사업」 대상기업 모집
 - 총 28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산업단지 내 복수 기업이 공동 활용하는 친환경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사업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 산업단지는 다수의 기업이 밀집된 집약적 공간으로 공동활용 설비 구축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노후 설비를 공동 활용 가능한 최신 설비로 교체할 경우 투자비 절감과 함께 탄소배출 저감효과 기대
 - 산업부는 2018년부터 폐열 회수 시스템, 폐열삭유 회수·정제 인프라 등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공동활용 설비 구축을 지속 지원 중
-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복수 수요기업 중심 지원 방식에서 확대하여, 산업단지 내 기업협의체 및 조합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이에 따라 공기압축기, 폐열회수설비, 고효율 보일러 등 공동활용 설비를 도입·교체할 경우 산단 내 다수 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탄소감축 효과 확대 기대
- 지원대상은 산업단지 내 공장등록을 완료한 중소·중견기업, 전문기업 및 관리조직 등이며, 공동활용이 가능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설비 구축 지원
 - 지원 범위에는 공정 폐열 회수 설비, 화석연료 대체 설비, 최적운전 제어시스템, 데이터 모니터링 및 측정 시스템(SW포함) 등
- 산업부는 공동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의 활용 수혜기업 수와 탄소감축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60%까지 국비를 지원할 예정

□ 산단 친환경 설비 인프라 지원사업

사업목적	산업단지 내 공동활용 친환경 설비 도입 및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업단지 그린전환 촉진
지원규모	국비 28억원('26년), 사업별 최대 10억원 지원(국비보조율 60% 이하)
지원대상	산업단지 내 공장등록을 완료한 중소·중견기업, 전문기업 및 관리조직
지원내용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 설비 구축, 공동활용 인프라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지원
지원설비	폐열 회수 설비, 고효율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 인프라, 폐절삭유·폐냉매 회수·정제 인프라 등
추진일정	사업 공고 및 접수('26.2~3월)→선정평가('26.4월)→설비 구축('26.5~11월)→사후관리 및 감축실적 관리(3년)

- 산업통상부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국내 생산 기반 강화와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금년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 계획 및 절차 공고
- (사업 성과) 지난해 22개 기업에 약 1,200억원(국비 700억원)을 지원하여, 총 5,561억원 규모의 입지·설비 투자 계획을 뒷받침
 - 지원 기업의 약 80%가 비수도권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금년 예산) 지난해보다 300억원 증액된 1,000억원이며, 지방비 포함 총지원 규모는 약 1,700억원으로 예상
 - 지난해 기업별 평균 지원 규모(약 55억원)를 고려하면 약 30개 기업에 지원이 가능
 - (지원 분야)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4개 분야 이외에 로봇·방산 분야를 추가, 총 6개 첨단 전략산업 분야로 지원 범위 확대
-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배경	첨단산업 분야 핵심 소부장 품목의 국내 생산 및 투자 촉진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추진
지원규모	‘25년 700억원(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 ‘26년 1,000억원(로봇, 방산 추가)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지원대상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지원내용	‘26년 신규 입지·설비투자에 대해 기업규모(중소, 중견), 지역(수도권, 지방)별로 투자액의 30~50%를 지원
지원절차	투자계획서 등 사업신청 접수(~7월) → 서면·발표 평가 및 지원 기업 선정(~9월) → 협약 체결 및 지원금 지급(~10월)

작 성 자

- 종합상담실 한국산업단지공단 파견관 정봉기

KOTRA자료 26-107

산업입지 정책동향(2026년 상반기)

발 행 인		강 경 성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26년 7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 의 처		종합상담실 (02-3497-1956)
I S S N		2983-2152



Copyright © 2026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